전북특자도 특별법 'K-Pop 국제교육도시 지정 · 지원 등 특례'

K문화 산업 선도한다

국제 교육 · 글로벌 문화교류 중요성 반영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농생명산업 분야 특례,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 특례, 생명서비스의 산업 특례,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및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특례에 이어 케이컬쳐 산업 선도를 위한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 특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케이팝(K-Pop)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및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은 새만금사업 지역내에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를 지정하고, 국제학교 설립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 정주 인구 증가, 해외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득 창출과 국가차원의 케이(K)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발굴된 것이다.

케이팝은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데다 국내외 청소년들 사이에서 배우려는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의 본향인 전북도가 케이팝 교육을 위한 정식 국내 학교를 설립하고,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제56조~제61조)

케이팝 국제교육도시(제56조)는 새만금사업 지역에 케이팝 국제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문화, 상업, 주거 등 자족적 입지 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도시공간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로 담았다.

케이팝 국제학교(제57조~제61조)는 외국학교의 분교 형식이 아닌 교육법인이 만든 정식 국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최근 민간 주도의 케이팝 산업 성장에 따라 케이팝을 배우려는 지망생들의 '학업중단', '진로변경의 어려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케이팝 국제학교는 공교육 차원의 전인적 교육 시스템으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팝 국제교육도시의 지정·지원, 그리고 케이팝 국제학교의 설립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과 국제 교육,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반영한 주요 의제이다.

전북 지역이 국제적으로 더욱 강력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케이팝 관련 산업의 국제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은 농악, 판소리의 도시로 이미 문화콘텐츠 산업역량과 교육도시로서 글로벌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대규모 부지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의 특례는 수도권에 편중되어있는 문화산업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 중 우수 상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지역활력화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북지역 총회가 지난 17일 전주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훼손하는 새만금 예산 폭거 즉각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KDLC전북지역회의 제공〉

"자치분권 · 지방자치 수호 다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북지역 총회 열고 운영위원 등 조직 구성… 상임대표에 권익현 부안군수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전북지역 총회를 열고 조직 구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제5기 상임대표 정원오 성동구청장)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으로 결성된 단체다.

또한 자치분권형 국가건설과 자치분권을 통한 정치활동 등을 하며 중앙과 광역별 지역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날 열린 행사에서는 총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권익현 부안군수가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공동대표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덕섭 고창군수와 광역의원 대표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기초의원 대표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대됐다.

이어 상임운영위원은 이정린 전북도의회 부의장, 진형석·김이재·김명지·문승우 도의원과 시군의회 의장단 대표, 일반회원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집행부에는 조직강화위원장에 윤정훈 도의회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에 서난이·권요안 도의원, 대변인에 김슬지 도의원·양정민 익산시의원, 대외협력위원장에 백창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홍보소통국장, 사무처장에는 김옥현 전북미래교육 공감 상임대표, 허갑진 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총무실장,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장이 공동으로 임명됐다.

이날 총회 안건으로 KDLC전북지역 정관 제정, 지역운영위원회와 집행부 등 조직 구성, 2023년~2024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 예산 폭거 즉각 철회와 자치분권 훼손 중단을 촉구하고 자치분권·지방자치 수호를 다짐했다.

권익현 상임대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정부여당이 보여준 행태는 '지방정부 무능론'을 키우고 '지방자치 한계론'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왔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KDLC 회원들과 연대해 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정원오 KDLC상임대표(성동구청장),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장민수 경기도의회 도의원, 박완희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기초의원, 14개 시군 사회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김관영 도지사,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첫 서명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돌입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서명자에 첫 서명을 시작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전북도민·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이면 128년의 전라북도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한이양이나 규제완화 등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연내 통과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범도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도에서도 국회 및 부처설득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재훈 기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이 18일 돌입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이날 전북도 서울사무소에서 서명지에 첫 서명을 시작하고 있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확대해야"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현재 실시되는 서비스, 여전히 부족 · 이용에도 한계 간병비극 막기 위해 관련 인력 충분한 확충 이뤄져야"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8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2023년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 등 경제적·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간병비극을 막기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 96%가 간병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간병인을 썼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65.2%가 간병비 부담을 꼽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어 "비록 2015년부터 정부는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용에도 한계가 있어 현재 많은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충분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근거 마련

이병도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차원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계기로 도민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 15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수도권 내 전북권 장학숙을 통합 운영해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확대를 촉구했고, 황혜숙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송기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안건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가결했다.

이어서 이만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논의

도의회 환복위 정책세미나… "사회활동 촉진 위해 필요"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18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정책세미나는 현재 사회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전북형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자리로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도입을 위해 어떠한 진행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 설명하였고, 현재 경기도 기회소득의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인 점, 장애인의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제시하며 장애인의 가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애인 기회소득의 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회소득에 투입되는 재원이 충분한지, 지원 대상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본 세미나를 개최한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전주7) 위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전라북도 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 지역상권 상생 · 활성화 조례안, 도의회 통과

서난이 도의원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도시 환경의 변화로 도심의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가 내몰림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전라북도의 도시환경 변화로 지역상권이 후퇴하고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상권 상호 협력과 특화거리 육성 및 지역상권 위원의 설치 규정, △상가건물 상생협력, △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김재훈 기자